# ‘무주공산’ 순천, 지역구 1곳 늘어나나

## 분구 가능성에 지역 정치권 관심…유불리 셈법 다양

## 민주당 독식 견제 심리에 야당 후보 선전 가능성도

‘4+1(더불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소식에 전남 순천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1석이던 지역구 의석수가 분구로 인해 2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28만150명·선거 15개월 전 인구 기준)의 경우 인구 상한선을 넘기게 돼 2개 선거구로 나눠지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최근 이정현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수도권 출마를 선언, 순천이 ‘무주공산’이 되면서 총선 입지자들의 셈법도 더욱 다양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중앙선관위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되기까지는 변수가 많아 분구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지역에서는 대부분 분구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지역민의 힘과 목소리가 중앙에 더 크게 전달될 수 있다”며 “지역구 분구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보들간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들을 자신의 표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후보 캠프에서는 오히려 분구 가능성이 반갑지만은 않은 표정도 읽힌다.

분구를 염두에 두고 예비후보 등록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순천시선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득 팔마청백리문화재단 이사장,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민중당은 김선동 전 의원, 무소속은 장성배 세계대학태권도연맹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여기에 조충훈 전 순천시장(민주당)과 김광진(민주당)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안신당의 기도서 전 전남도의원도 여전히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순천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관규, 서갑원, 장만채 예비후보가 ‘빅3’를 형성하는 형국에서 분구가 되면 민주당이 두 자리 모두를 독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이 두개의 선거구로 나눠 공천과 본선거 경쟁을 펼치면 첨예한 경쟁과 갈등 양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민주당 독식을 견제하는 심리도 나타나 야당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교수(강동대학교)가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해찬 대표, 양향자 전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과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최혜영 교수는 1979년생으로 신라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했지만 2003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를 입고 무용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 다시 ‘긍정평가’ 앞선 文대통령

## 리얼미터 여론조사…국정지지율 48.3%

## 부정평가 47.4% 여야 대립 격화 속 지지층 결집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2019년 12월 4주차 주중 동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7%p(포인트) 오른 48.3%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7.4%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60대 이상과 50대, 대구·경북(TK)과 호남, 서울, 경기·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반면, 40대와 충청권에선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수층에선 부정평가가 80%선에서 70%대 중반선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보수층 부정평가 80.8%→74.9%),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다시 80%선에 근접한 것(진보층 긍정평가 77.0%→79.4%)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3%, 2.4%p 상승)과 정의당 지지층(78.7%, 7.7%p 상승)에서 지지율이 올랐으며,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28.2%, 1.6%p 상승)했다.

이른바 ‘감찰 무마·선거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중동향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재원 “선거구, 광주·전남·전북 순 줄여야 헌법정신 맞아”

## “유성엽 지역구 유지 위한 것”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인구 비례해서 지역구 수가 많은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군포, 안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구 의석수는 줄어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이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곳이 4+1 협의체라고 해서 또 무슨 도둑질을 했나 확인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의 기본 대원칙은 인구 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확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인구대비 지역구 수가 많은 광주에서 한 석을 줄이고 그 다음 순서로 전북과 전남, 부산 순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구 평균 인구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세종”이라며 “253석을 유지하려면 세종시를 분구해야 하고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하나씩 줄여야 정상적이고 헌법정신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 평화, 정의, 바른미래, 대안 가장 좋은 말들을 쓰면서 입만 벌리면 표의 등가성을 말하지만, 유성엽 (대안정치) 의원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제부안 선거구를 유지하려다보니 춘천과 순천을 상한선 초과해 분구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북 의석 수는 유지하고 전남 의석수는 오히려 1개 늘리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게 대체 제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 전 탈당할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탈당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다음달 5일) 창당 전에는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당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1월5일 창당할 것이라고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뉴스1